

군공항 주변 무분별 드론 조작 주의보

최근 드론 비행 금지구역인 광주 군공항 주변에서 무인 비행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목격돼 군 당국과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비행 금지지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는 등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민용 드론을 조작하는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 광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공항 및 공군기지 활주로 주변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장치 3~5대가 날고 있는 것을 경계 근무 중인 병사가 발견했다.

군 당국은 야간까지 방호 훈련 중 비행장치의 불빛을 보고 추적했다. 비행장치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인력을 투입, 수색을 벌였으나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항 반경 9.3km 이내 비행 금지 구역 "조종 준수 사항 어기면 처벌·과태료"

경찰은 군 시설을 정찰 또는 촬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시간대와 지리적 여건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비행장치가 시간차를 두고 군 시설과 떨어진 황룡강 둑길에서부터 목격된 점, 훈련으로 군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는 점,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취미로 무인 비행장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군 당국과 계도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상 모든 조종자는 드론을 날릴 때 준수 사항을 꼭 지켜

야 한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포함한 전국 비행장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된다.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 3~7일 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면·지면·구조물 최상단 기준 150m 이하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비행 금지, 안개·황사 등으로 가시거리를 벗어나는 곳에서 비행 금지, 일몰 후 일출 전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과 음주

비행 금지 등도 준수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신고하지 않고 25kg 이상 드론을 띄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드론 조종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분별한 비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법 172·182·18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공항과 황룡강 일대에 드론 비행 준수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각종 시스템 개선과 홍보·계도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형택 기자

고속도로서 승용차 충돌 후 화재 2명 사망

14일 오전 2시30분께 장흥군 장동면 장흥 방면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장동 37km 인근 도로에서 외제 승용차량이 도로 중앙분리용 화단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으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종민 기자

광주 한 주택 마당서 50대 분신 시도

13일 오전 11시 25분께 광주 동구 한 주택 마당에서 김모(50)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김씨가 얼굴·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지인은 양동이에 담긴 물로 김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자.

경찰은 당시 함께 있던 김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끈 김씨의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완도해경, 해상표류 어선서 9명 구조

완도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선박의 승선원 9명이 구조됐다.

13일 완도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25분께 완도군 여서도 남서방 1.9해리에서 기관고장으로 인해 표류 중이던 26t급 어선 A호의 승선원 9명을 구조했다.

A호는 지난 11일 제주도 하추자도 신앙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전기적 결함으로 추정되는 기관고장으로 인해 표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신고 뒤 곧바로 출동해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한 뒤 A호를 인근의 항구로 예인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출항 전 장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어린이집 승합차·트럭 충돌 7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10시43분께 진도를 남동리 남동교차로에서 1t 화물트럭과 마주 오던 어린이집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승합차에 타고 있던 15명 중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승합차에는 교사 2명과 어린이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부산 빌딩 사무실 냉장고서 영아사체 발견

부산의 한 빌딩 사무실 내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기화원인 A(50·여)씨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영아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사무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오래된 비닐봉지 등을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버리다가 영아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아의 사체는 병동 상태였으며, 수개월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로 B(35·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하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시신을 모 병원 영안실로 옮겨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광주경찰, 6·13 지방선거 관련 9건 조사중

광주지방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14일 현재 9건 1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3건 3명, 급품제공 3건 4명, 허위사실공포 2건 4명, 공무원 개입 1건 1명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전방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급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전남 지역 22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신봉우 기자



도로, 공원이 되다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2018 차 없는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월 2회 운영했던 '차 없는 거리'를 올해부터는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한다.

전남도, 농·산림작물 저온피해 정밀조사·피해복구 지원

전남도가 지난 7~8일 이상저온으로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장흥과 순천지역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2.1도, 영하 1.4도로 내려가는 등 7일부터 이를 동안 전남지역에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화 중인 배, 복숭아 등 과수작물과, 뽕은감과 무릅나무 새순, 일부 지역에서 수확 중인 고사리 등 산림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부에 피해복구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나섰다.

과수작물의 경우 과수저온피해 조사 요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5월 10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1ha 기준 농약대(과수류) 176만 원, 대과대(엽채류) 41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 규모가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지원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지난 1~2월에도 유래 없는 한파로 배추, 녹차 양파 등 농작물 통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 1560명에게 24억 원의 복구

비를 지원했다.

산림작물의 경우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뽕은감의 저온피해는 현재 피해 관찰이 어려워 피해가 나타나는 5월 이후 정밀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임업농가의 피해 조사 결과 피해 상황 및 재난지수에 따라 농약대, 대과대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차리(30년,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